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1997
------------	-------

발의연월일 : 2014. 10. 6.

발 의 자 : 심재권 · 유기홍 · 이미경

박혜자 · 부좌현 · 박남춘

민병두 · 최민희 · 이상직

강동원 · 문희상 · 이찬열

김경협 · 배재정 · 김춘진

임내현 · 이석현 의원

(17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일본의 혐한시위가 한국인에 대해 과격한 표현과 욕설을 넘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조차 헤이트스피치에 우려를 표하면서, 차별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한시위 허가를 내주며,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그 어떤 구체적인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혐한 시위를 주도하는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가 내뱉는 반복적이며 혐오스럽고 증오 섞인 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재일한국인에게 고스란히 고통과 상처로 남는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 행위임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자로 일본에 정착하게 된 우리 재일동포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혐한시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내 재특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 이자, 살인적인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혐한시위로 인하여,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과 사후조치에 적극 나섬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 근절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 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했듯이 일본 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로서, 한·일 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UN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 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만 해도 일본 동경지역과 주일대사관 주

변에서 일어난 혐한 시위건수는 총 349건으로, 혐한 시위자들이 수년 전부터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 주도로 한인 상점이 많이 모여 있는 동경의 신오쿠보에서 시위를 벌여 한인 상점의 매출이 크게 줄고 한인들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특히 이런 시위로 인해 어린 아이들조차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서도 혐한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차별을 부추기는 이 같은 행동을 금지하고 관련자 처벌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혐한시위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등에 대하여 최고 5년의 징역형에서 수천만원대의 벌금 까지 부여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이같이 인종차별적 혐한시위가 계속된다면 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인종차별적 혐한시위를 막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 역시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외교력을 발휘하기를 촉구함.